


보도자료 2013. 1. 15.	 <div style="text-align: center;">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담당자	전보성 사법지원심의관(☎02-3480-1679) 원호신 정보화심의관(☎02-3480-1231)
	공보관실 ☎ 3480-1451	

2013. 1. 21.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 시행

- 특허, 민사에 이어 가사, 행정 사건의 전자화로 본안사건 전자소송 마무리
- 3년의 전자소송 경험에 기반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전자재판 시스템 구현
-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접속으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선진제도의 결정판
- 민감한 가사사건의 전자제출로 사생활 보호 및 신속한 절차 진행 가능
- 행정청을 상대로 인터넷 전자소송이 가능해져 개인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춤

□ 시행 경과

-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년의 전자소송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 행정 분야에 관하여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전자재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013. 1. 21.(월) 00:00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행정 본안 및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 서비스를 오픈함
- 전자소송 추진 경과
 - 2010. 4. 26. 특허전자소송 시행 (100% 전면 전자화)
 - 2011. 5. 2. 민사전자소송 시행 (선택적 전자소송시행 중이며, 현재 이용률 43%)
 - 2013. 1. 21. 가사·행정전자소송 시행 예정 (가사는 선택적 전자소송, 행정은 사실상 전면 전자소송 예상)

□ 시행 대상 사건

○ 가사소송

-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소송은 물론,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자녀의 성본 변경,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유언 관련 분쟁 등 신분관계로 인한 각종 재판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등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제출 절차 진행 가능

□ 가사, 행정 전자소송의 특징

- 민사 전자소송시스템 구현 경험과 실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하였고, 민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록뷰어, 전자캐비닛, 조서작성도구 등을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 특히 민사와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 전자문서의 열람제한 및 열람신청시스템을 별도로 구현하였고, 가사조사관과 상담위원 업무시스템을 맞춤형으로 구현하였음
- 행정청인 피고가 99%인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전면적인 행정전자소송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전국 단위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관련 서버를 확충하였음

□ 시스템 오픈 준비

- 2011년 12월부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은 물론 서울가정법원과 서

울행정법원 자체 TF 활동에 기반한 착실한 업무설계를 기반으로, 13개월의 개발기간 동안 32명의 법관 및 직원 등 전문인력과 연인원 620명의 외주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구축을 완료하고, 2013. 1. 11. 최종 테스트를 마쳐 오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

- 가사, 행정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서울가정·행정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정구축, 논의 피로가 덜한 LED 방식의 27인치 대형 모니터 보급, 편면적 전자소송으로 인한 법원직원 경감을 위한 E-post 출력센터와 전담 스캔센터 구축 지원을 준비 중임
- 내부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연인원 500여 명의 가사, 행정 재판부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전자소송 세미나와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소송수행자, 변호사회, 법무사회 소속직원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연 인원 1,382명에 대한 전자소송 설명회를 실시하여 가사, 행정 전자소송 시행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준비를 도모

□ 시스템 반영 작업

- 실제 오픈을 위한 반영은 2013. 1. 19.(토) 00:00부터 1. 21.(월) 00:00까지 꼬박 48시간에 걸쳐 대대적인 프로그램 수정작업으로 진행됨
- 48시간의 작업 시간 동안에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재판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며, 민사, 특히 전자소송 서비스는 기간 준수 등 긴급한 경우에 대비한 전자 문서제출은 가능하나, 송달문서 확인, 전자문서열람 등은 제한됨

□ 기대 효과

- 특히 가사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송달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프라이버시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확인을 통해 신속한 재판처리가 가능하게 됨
-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의 99%가 의무적 전자소송 대상자인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원하는 민원인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소송제도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그 밖에 전자제출 소장에 대한 10% 인지감액이 적용되며, 편리한 전자제출 방식에 따라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 절감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접속, 전자법정에서의 법원기록 공유를 통하여 국민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 1. 21. 성공적인 가사행정 전자소송 오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오픈 직후 내외부 사용자에게 대한 초기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매진할 계획임
- 이후 2013. 8.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4. 1.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한 다음, 2015. 1.에 집행, 비송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로 확산함으로써 재판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고품질 사법서비스 구축을 완성할 계획임
- 전자소송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보유한 세계 일류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양질의 재판절차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향후 자체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 전자소송 도입을 원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 대한 시스템 전파 및 지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자소송 서비스 운영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끝)